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 두 현*

< 목 차 >

- I. 서 론
 - II.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 형태 및 운용실태
 - III.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용실태 및 문제점
 - VI.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군인은 능력과 실적에 의해 채용되어 평생 동안 근무할 목적으로 임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라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을 잃어가고, 우리 사회의 젊은이와 기성세대 양자로부터 공히 기피 받는 직종으로 변해가고 있다.¹⁾

우리 군은 6.25전쟁 이래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대한 강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군을 천직으로 삼아 10년 이상 장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은 사회동료들과 비교하여볼 때 상대적 빈곤과 군복무에 대한 후회 등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998년 2월 전국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직업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직업으로써의 군 직업은 14개 직종가운데 13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14개 직종가운데 14위였다(동아일보 1998. 10. 7일자, A 15면).

더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3.2%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군 고급간부들의 정년 단축 등의 여파로 군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우수한 군 출신의 재취업이 감소하여 상당수의 인력이 조기퇴직하여 연금에만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²⁾

특히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전역군인 가산점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23일에 전역 군인지원에 관한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는 헌법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거로 위헌을 선고³⁾한 것은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현역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역군인 뿐만 아니라 현역군인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국토방위를 위하여 희생한 부분에 대한 기회보상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적 차원에서 사회 환경 변화와 군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률 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군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생산적,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자생적 복지차원의 직업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 전투이외의 군사업무기능을 군사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아웃소싱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전역군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군사 훈련지원과 군수지원 및 컨설턴트 업무 등의 종합적인 군사분야 서비스 산업인 민간군사기업(PMC : Private Military Company)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⁴⁾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 복무 후 전역 한 군출신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자원관리⁵⁾가 가능하도록 하여 한국의 사경비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각종 자료 및 정기간행물 등 기초문헌에 대한 고찰로 우

2) 매일경제신문, 2003. 8. 5일자, 사회면.

3) 헌법재판소사건 98헌마 363, 1999. 12. 23.

4) 문광건,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주간국방논단(제881호)」, 한국국방연구원, 2002, 2면.

5) 구충희, "국방자원관리 아웃소싱 추진방안에 관한연구", 국방대학교, 2000, 34면.

리의 안보 현실과 장병들의 복지후생 향상 등을 고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전역군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 형태 및 운용실태

1. 외국의 전역군인지원제도 및 민간군사기업제도 형태

가. 전역군인지원제도

외국의 전역군인지원제도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부처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처해진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다.

지원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 <표2-1>과 같다.

첫째, 생활지원에 있어서 전역군인의 전역 후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대부제도는 미국 및 대만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군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일반 전역군인의 취업이 전반적으로 용이하여 다른 나라와 같은 생계 지원성격의 프로그램은 약하며, 직업보도기능을 전역군인부가 아닌 일반행정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둘째, 취업지원분야는 각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대만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하여 전역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무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교육지원분야의 경우 미국은 자격인증제를 적용하여 군 교육 및 경력이 사회에서도 공인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및 프랑스는 원격통신교육을 이용하여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대만에서는 군인가족에게까지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직업채용을 통해서 전역군인의 생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2-1>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 비교

(범례 : ● 직접관련 ▲ 간접관련)

구 분	지원내용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대 만	
지 원 분 야	생활 지원	실업보험	●				
		급여수당	●		▲	●	
		양로보호			●		●
		대부지원	●				●
		주택지원					●
	취업 지원	취업알선	●	●	●	●	●
		우선채용	●				●
		의무고용			●		
		가산점부여	●				●
		가족취업지원					●
		사업지원					●
		직업보도기구	●	▲		●	●
		인력정보센터	●				
	교육 지원	사회적응교육	●	●			
		직업진환교육	●		●	●	
		자격 인증제	●				
		위탁교육				●	
		군시설장비비용		●	●	●	●
		원격통신교육	●	●		●	
		가족교육지원	●				●
	의료 지원	치료보장	●		●		●
		의료보험	●				
	관장기관	국방행정기관	▲	●	▲	▲	▲
		보훈행정기관	●			●	●
		노동행정기관	●	▲	●		▲
		제대군인협의회		●			

넷째, 의료지원분야를 보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보호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전역군인부 예산의 44%를 의료비지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171개 종합병원과 350개의 외래진료소를 통해 복무관련 상이군인은 물론 생계곤란 전역군인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보장국가와 달리 의료체계가 개인보험으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의료비부담이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통해 전역군인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미국정부의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⁶⁾

나. 민간군사기업제도 형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는 용병(Mercenary)의 제도에서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자국민의 보호 또는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사용해 오던 제도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인 민간기업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방대한 수의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부터 미국 국방성에서 '국방인력 전직 알선체계(Defense Outplacement Referral System)'라는 인력전환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의미로 발전한 것이 현대적 민간군사기업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은 미 국방성이 집중과 분산, 몸집 줄이기, 바깥에 일 돌리기 등을 통하여 국방성은 국방성만이 할 수 있는 전투에만 주력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종 부수기능 등을 민영화하는 데 힘입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군사기업제도란 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계약자로 하여금 전투수행과 첩보수집, 군사훈련 지원과 작전지도 등 컨설턴트 업무, 무기조달의 중개 등 브로커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종합적인 전쟁·군사 서비스산업을 의미하고 있다.⁷⁾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의 형태는 각국의 상황과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6) 정길호, "장기복무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제61호)」, 한국국방연구원, 2003, 150-152에서 재인용.

7) 문광건, 전계논문, 2면.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나 ① 군사지원(Military Support), ② 군사자문(Military Consulting), ③ 군사력제공(Military Provider) 등 세 가지 형태로 적용 될 수 있다.⁸⁾

첫째, 군사지원은 민간군사기업이 기획의 수립이나 직접적인 적대행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병참·기술지원·수송 등 전투작전에 필수적인 군사적 영역의 후방지원이나 보조적인 서비스 등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는 형태이다.⁹⁾

둘째, 군사자문은 군사적인 문제의 자문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형태로 군 운용에 대한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의 기능발휘나 구조조정의 핵심인 전략적·운용적, 조직 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군사력 제공은 전술상황에 초점을 두고 최전방에서 실전에 종사하거나 첩보수집 및 정찰활동, 그리고 야전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제공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투행위에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2.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용실태

전 세계적으로 민간군사기업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파견군을 지원하거나, 자국 내에서 군사적 영역의 후방지원이나 보조적인 서비스 등 기능적인 소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며 안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숫자도 은밀성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그제류티브 아웃 컴스 회사(EO)¹⁰⁾ 등 약 500여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

그리고 군사훈련 및 무기조작훈련을 민간군사기업에 맡겨 활용하고 있는 국

8) P. W. Singer, *Corporate Warrio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3(WINTER 2001/02), pp. 200-202.

9) 모병업무, 군사훈련, 기지내의 잔디발관리, 쓰레기 수거, 경호업무,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중장비공급, 항공기나 헬기 유지보수, 식품조달, 식당운영, 세탁, 우편업무 등 군 행정업무 등이다.

10) EO회사는 1990년대 초 앙골라 내전과 시에라리온 내전에 당시 시에라리온 정부와 22개월간 3,500만달러와 UN과는 8개월간 4,700만 달러를 평화유지활동을 목적으로 계약하여 수익을 올린 바 있다.

11) 동아일보, 2002. 5. 11일자, A29면.

가도 1990년대 이후부터 미국,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푸아 뉴기니아,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브라질 등 42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전직 군·경찰 출신 등을 중심으로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호주·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하여 요인경호, 시설경비업무, 민간조사업(사설탐정업) 및 민간조사원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 미 국

미국은 민간군사기업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군사기업체로 ① 민간자원전문회사(MPRI: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② Dyncorp회사, ③ Vinnell회사, ④ Cubic회사, ⑤ ITT회사, ⑥ KBR회사(켈로그 브라운 & 루트) 등의 업체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군사혁신 개념으로 전투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민간군사기업 의존도가 높아져 수주액이 350만달러(약 45조원)로 연평균 10~15%씩 늘어나고 있으며,¹²⁾ 또한 사경비원이 총 190만명에 달하고,¹³⁾ 민간조사업(탐정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도 5만5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민간조사원 아카데미(Academy of Legal of Investigative Services)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직 민간조사원들의 약 75%가 전직 군 및 경찰 출신들로 운영되고 있다.¹⁴⁾

민간자원전문회사(MPRI)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이 업체는 1987년에 퇴역 육군장군 Vernon Lewis에 의해 창설되어 다수의 4성장군 출신과 약 1,200여명이상의 퇴역장교 및 민간인 출신 7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이 업체의 특징은 전역한 우수한 군사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정책지원과 군사자문, 군사훈련, 장비지원, 모병업무 등을 수행하고, 군사문제와 관련된 12,500여종의 군사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군사자문과 교육

12) 한겨레21, “전쟁을 먹고사는 어두운 기업”, 2003. 7. 23;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과 미국의 격주간지<포천>인용.

13) 이윤근, 민간경비론, 도서출판 엑스퍼트, 2003, 19면.

14) 김두현, “공인민간조사제도 입법화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제24집), 2001, 440면.

15) 김두현 외1,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02, 190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전투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던코프(Dyncorp)회사는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체로 1995년도부터 군사분야에 진출한 기업으로 구성원이 주로 전직 델타포스 등 특수부대 출신 등으로 2만3천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기업체로서 연간 매출규모 23억 달러로, 미국정부로부터 군사계약 수주가 13위에 오른 기업이다. 이 업체는 군 항공기 정비와 아프칸에 카불시내의 대통령관저 경비와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경호업무(150여명이 파견되어 담당), 치안업무 및 경찰 운영자문과 사법기구에 파견(1,000여명)되어 사법관련 업무를 계약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¹⁶⁾ 중남미에서도 경찰요원 훈련 등의 군사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남미와 벌이고 있는 마약전쟁에도 MPRI 등 6개의 기업과 함께 미국정부와 계약에 의해 콜롬비아 경찰과 마약퇴치군의 훈련과 마약 재배지역 및 밀매자의 감시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큐빅회사(Cubic)는 1951년에 창설되어 군사지원 및 수송분야에서 군 출신을 중심으로 약 4,500여명 직원을 고용하여 전술훈련지원, 전투시뮬레이션, 전투정찰 및 항공구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앞서 미 국방부와 계약에 의해 미군들에게 전투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여 폭약설치 훈련, 장비 교육훈련, 실전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1990년대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나토 신규 가입국 및 후보국을 대상으로 군사훈련도 시킨바 있다.

끝으로 켈로그 브라운 & 루트(KBR)회사는 1990년대 코소보전쟁 때 발칸반도에 주둔한 미군들의 식사·식수 제공, 피복 세탁과 장비세척, 우편업무 등을 독점 운영한바 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유전화재의 진화와 복구 등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미군 병사의 식사와 세탁, 쓰레기 처리, 우편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¹⁷⁾

16) 헤럴드경제, 2003. 4. 28.

17) 한국경제신문, “군사서비스기업 뜬다”, 2003 .6. 17일자, 8면.

나. 영국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군사기업으로 샌드라인 인터내셔널회사(SI : Sandline International), 방위시스템회사(DSL), 살라딘 시큐어리티회사(SS), 글로벌 리스크 회사, 비넬회사 등의 업체가 있다. SI회사에서는 군사자문과 군사훈련, 지뢰제거, 요인근접경호, 군수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로부터 정부군 훈련을 대가로 3,600만 달러를 벌어들인바 있다. 글로벌 리스크회사는 이라크 전후 행정을 담당할 연합국 임시기구(CPA)에 무장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넬회사는 이라크 북부에서 이라크군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SS 회사는 영국 국방성으로부터 오만 정부군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교육을 시킨바 있다.

다. 독일

독일은 현재 사경비업체가 2,500여개 있으며 14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¹⁸⁾ 특히 이러한 사경비업의 성장배경으로는 공공부분의 위탁발주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1965년부터 '군부대경비법'이 실행됨에 따라 군부대 시설을 민간인이 경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으로 제공 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군대시설 경비를 민간군사기업의 한 형태인 사경비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1993년 이후부터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경비를 사경비회사에서 기계경비 설치·운영 등의 기술분야로 확장되어 시행하고 있다.

라. 캐나다

캐나다정부는 민간군사기업인 ATCO Frontec회사, Ednoonton회사, Alberta회사 등과의 계약에 의해 보스니아에 파견된 병사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군의 병참·보급·물자·수송·정비 및 비전술통신 등의 지원분야에 약 20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운용한바 있다.

18) Gollan., Private Sicherheitsdienste in der Risikogesell Chafe Freiburg I. Br. : Bath Medien-haus GmbH, 1999, S. 60f ; www.bdws.de(2002년 3월 14일 인용).

마. 일본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어서 전역군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전역장병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근무를 면제받으며 이 기간내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되어 전역 전 1개월간 일반상식, 교양 등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전역예정장교는 정년도달 2년 전에 개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부대로 보내져 퇴역 후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 연고지 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설치하여 직업적성검사와 업무관리교육, 사회적응교육 및 관련기능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전역 기술부사관, 기술병, 위관들은 국가자격면허시험 합격을 위해 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직업훈련을 4-5개월간의 교육을 받는다.

일본 군인의 재취업직종 중 세무회계, 전문기술, 군사장비 판매외교, 보안경비 등의 분야로 진출되고 있다.¹⁹⁾

Ⅲ. 한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민간군사기업의 운용실태

국내에서도 민간군사기업제도 개념의 이해부족, 제도적 장치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근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군사경험을 활용하고 전역군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기업인 (주)승진 MR&D(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와 국방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설립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등이 민간군사기업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승진 MR&D는 장기복무 후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군사경험을 활용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어 상근 및 비상근 연구요원 및 개발요

19) 이승화, "재대군인 취업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8-29면.

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는 군 관련 연구 용역사업, 작전 및 교육 훈련관리(훈련지원 및 훈련장 관리), 용역개발, Think Pool 지원사업, 신형장비 및 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군사분야에 관한 제 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의 취업활동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어, 국방·군사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와 현역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창업, 사회적응 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의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 교육보호, 의료보호, 대부지원, 주택우선분양, 공공시설이용 및 국립묘지안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20여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에 대하여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에 의하여 전역예정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보도교육과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제대 군인의 지원과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이상 복무전역자는 약 17만명 정도가 있으며, 연평균 3,400명 정도가 매년 사회로 나오고 있다.²⁰⁾

군에서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 출신의 재취업은 일반사회 직장인에 대비하여 정년이 짧고, 일반 공영 및 사기업체의 직원들의 개인 복지차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한 비전문가들의 재취업 제지와 IMF이후의 여파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표3-1>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취업률은 1998년 42%에서 2002년 현재 27% 수준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3-1>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출신자 취업률 현황

연도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취업률	42%	30%	28%	28%	27%

자료: 매일경제, 2003. 8. 5일자 사회면.

20) 이승학, 전계논문, 3면.

그리고 전역한 군 장성출신 역시 <표3-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0년도에는 총 1,471명 중 699명의 취업으로 47.1%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8월 현재 2,084명중 374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 취업률이 17.9%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3-2> 연도별 전역장성 출신의 취업 현황

연도별	총 인원(명)	취업인원(명)	취업률(%)
1990	1,471	699	47.5
1996	1,778	544	30.6
1998	1,859	318	17.1
2001	1,892	275	13.9
2002	2,035	324	15.9
2003. 8	2,084	374	17.9

자료 : 국방부, 「국방저널 2003.11」, 2003, 19면.

최근의 국내 전역장성 출신들의 재취업 실태를 보면, 국영기업체나 산하단체의 진출은 줄어든 반면 자신의 개인능력에 따라 대우와 평가를 받는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 의학계, 법조계 등 개인의 능력 지향적인 분야로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민간군사기업 운용의 문제점

오늘날 직업군인은 사회적인 변화현상과 계급사회의 제도적인 측면, 군인신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문제 및 공급자 중심의 전역군인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직업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군사기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근본적으로 법적 · 제도적 미흡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령의 제한, 직업보도 총괄기구 부재, 재취업 능력개발의 미흡, 제대 직

업군인 의식 문제, 연급지급제한 등 많은 부분들이 있다.²¹⁾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출신의 취업제한과 연계하여 취업 장애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와 취업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과 무형의 효과를 창출하는 군 업무수행은 유형의 효과를 요구하는 일반기업 업무수행의 차이에 따라 군 출신의 취업은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등의 이외의 직종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직업군인의 조직 특성상 조기 정년에 따른 취업 적령기를 지난 후에 사회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연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은 피라미드 구조상 개인적인 결함이나 과오와는 관계없이 평균 42-58세에 제대하게 되어 가장 활동적인 나이에 정년을 맞이하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야 하는 30대 적령기를 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취업 창구 및 제도를 총괄하는 전역군인 취업관련 기구간의 업무연계 미흡과 적기 적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직업보도 교육 역시 직접 취업과 연계된 현실적인 교육보다는 소개위주의 교육과 소수의 기술·기능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지원제도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용자와 취업의뢰 기업체 모두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계급과 직위에 상응한 사회적 명예나 지위유지와 높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장기간 특수조직의 틀에서 지시일변도식의 사고의 생활습관으로 입사 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곤란하여 조기에 스스로 퇴사해버리는 점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직무수행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한 군 교육관련 부서의 상호연계성과 지원체제구축이 미흡하여 일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결여와 개인적인 학

21) 자세한 내용은 이송학, 전계논문, 49-53면 참조.

문적인 자격과 전문적인 능력 미개발 등은 재취업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²²⁾

IV.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

1.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1918년 이후 독일의 민간경비회사들이 군부대경비를 담당해 온 바와 같이 유동적인 탈냉전적 안보환경에서 국제기구 및 분쟁 관련국들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PMC)은 매력적인 성장산업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안보에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민영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위협증대와 비효율성, 선진국들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피로증, 유엔의 기금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우수한 퇴역군인이 지휘하는 민간군사기업제도의 활용으로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²³⁾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을 창설함에 있어 미국의 현지 파견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계약자로 하여금 이들을 훈련시킬 것을 검토한바 있다.²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요르단왕실 등과 신변경호계약을 맺어 중동지역에 경호요원을,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경찰의 무도 및 사격훈련 지도를 위한 교관요원을 파견시키는 것이 확대될 전망이다.²⁵⁾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교육인력 등을 제공하여

22) 김정현, "제대군인 재취업을 위한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방안 연구", 「합참 제22호」, 합참모본부, 2004. 1, 193면.

23) 문광진, 전계논문, 5면.

24) Wall Street Journal, April 19, 2002.

25) <http://news.empas.com/show.tsp/20031002n01544>.

한국의 국가정보망구축과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국익발전 방안이 강구 될 것에 대비한 군사기업 인력육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은 현재의 인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모습이 바뀌어 나갈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병력규모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방기능을 종래에는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핵심 기능만 제외하고 상당 부분의 주변기능은 민간영역의 외주에 의존하는 국방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들이 담당할 분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비 기술적인 사업인 지뢰제거 및 첨단 정보기술 분야, 각종 전투군무지원분야 등 군사지원분야들이 유력한 외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군사자문분야에 대한 해외진출과 군사력제공 분야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자국의 민간군사기업을 사전에 육성해 두지 않으면, 부득이 많은 비용과 주권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외국의 군사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대규모 해외 의존으로 인한 국가기밀 노출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미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군경비의 수요가 많은 실정이므로 대폭적인 민간이양이 이루어진다면 사경비업무의 영역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국가고시 1차시험 면제대상에 2001년 법개정에 의하여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여²⁶⁾ 현역 및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듯이 민간군사기업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²⁷⁾

2.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적용방안

가. 민간군사기업의 가능 업무분야

최근 국방부 차원에서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역군인의 사회적응 능력

26)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참조.

27) 김두현 외1, 전계서, 484-485면.

향상과 재 취업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군 내부적인 소요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에 수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제대한 군 출신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생적인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하여 특화된 직종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때문에 앞서 설명한 민간군사기업의 형태 중 군사력 제공분야는 한반도 안보 여건상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 군사자문 및 군사지원분야에서 군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제대군인의 재취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 관련 업무와 일반 기업체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특화된 새로운 민간군사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법적 ·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²⁸⁾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분류하면<표4-1>과 같이 군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자문, 군사교육, 군사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표4-1> 민간 군사기업 적용 가능 업무

구 분	적 용 가 능 업 무	비 고
교리연구	· 주요 개념분야 : 현역위주 · 기술/제대/기술교범: 민간군사기업	과제별 연구팀 구성
정책과제	· 대학 및 관련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정책과제 선정연구	군사연구소와 연계 연구
Think Pool	·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용역연구	과제별 연구 인력 팀 운용
해외자료번역	· 군사자료 번역 정리 및 발간	번역팀 운용
군사자문	· 벤처기업, 무기체계 개발연구 자문	전문가 파견
훈련 통제 및 평가	· BCTP, KCTC, 야전 마일즈 훈련 통제 및 평가	통제관/교관 운용
훈련장관리/운용	· 대공사격장 관리 *하위직 취업창출 가능	관리회사 운용

28) 국방부, “국방부 취업지원 추진계획”, 국방부, 2003.

훈련교육 및 지원	· 대공표적기 훈련 · 외국군인 및 경찰 지도요원 파관 *전문요원 취업창출 가능	관리회사 운용
정비	· 전문성을 요하는 정비분야 생산 업체와 정비체계 구축	아웃소싱 개념 적용

특히, 각국의 VIP경호요원, 군인, 경찰 등의 무도 및 사격훈련 지도요원을 파견하여 단기적으로는 한국국가의 정보망구축과 사기업의 발전,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분단하에 놓여있는 한반도를 통일하는데에 있어서 우호적인 커뮤니티의 조성을 위해서도 해외교육 인력수출이 절실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런던IISS의 책임하에 영국·일본의 현역을 바탕으로 진행중에 있는 러시아 극동의 '전역군인 사회교육센터' 건립·운영 프로그램에 한국 국방부의 책임아래 전역군인, 기부금, 기술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민간군사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²⁹⁾

<표4-1>에서 제시한 군사자문, 군사교육, 군사지원 분야 이외에도 민영교도소 운영제도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특수대학 설립 운영,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감당하는 특수경비업체 운영, 경비업법시행령에 특수경비업의 겸업가능한 업무로 분류된 탐정업무, 주요 요인경호업무, 국가 공인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과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국방 정보화 분야 등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나. 참여정부에 있어서 민간군사기업의 설립방안

민간군사기업의 적용 가능한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국적 여건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민간군사전문기업(가칭)”을 정부 및 국방부차원에서 기업을 설립·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대학(VSUE)측에서 한·러 공동프로젝트로 5내지 6개월기간으로 1년 2개과정을 설립하여 경영·경영학 강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민간군사전문기업은 ① 기획 및 관리(군 관련사업지원, 시설관리, 경호경비, 민간조사업무, 군 관련행사 대행), ② 연구개발(정책과제 연구, 교범 · 교리 연구, 자료번역, 군사자문, 군사관련 대학운용, 교육훈련장비 개발, 정보보안장비 개발), ③ 교육 및 훈련(훈련통제 평가, 훈련장 관리,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산물의 질 향상을 위해 개별 연구용역보다는 민간군사기업 단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연구관 및 직원을 상근요원으로 운용하고, 비상근요원은 담당 연구과제 및 업무수행 여부를 참작하여 군 관련기관 및 업체에 파견형식의 근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단위의 사업관리 및 업무 소요창출을 위해 자격 및 능력 중심의 채용방식이 적용 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의 확대 · 시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전역군인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부의 취업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향상과 복지 및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민간군사기업육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발전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개념정립마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민간군사기업 활용분야 확대

현재 운용중인 대 · 내외 용역제도와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민간군사기업이 활용 가능한 분야인 훈련통제 및 평가, 훈련장 관리 및 운용, 훈련지원분야에 대해 군사 전문회사에서 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사학술 용역연구사업 관련 운영규정 중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 개정하여 민간군사기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질 및 신뢰도 향상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경비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의 영역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³⁰⁾

(2) 민간군사기업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연구개발비 등 정부기금지원과 군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군사기업의 난립을 막고,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및 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만 적용하는 허가제 내지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 기업의 허가 및 등록조건에 일정수준의 전역군인 취업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민간군사기업의 통제 및 관리 전문부서 운영

효율적인 민간군사기업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국방부 차원에서 전역군인 취업 창출과 연계하여 사업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지원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부서를 신설 운용함으로써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

(4) 민간군사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창출 활동 강화

민간군사기업의 업무 소요창출을 위한 일반대학교 내에 군사문제연구소 설립과 관련 군사분야 학과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군사학 발전과 군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 관련 교수요원 취업 증대 등 민간군사기업 요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취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각종 군의 전문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공인민간조사원 양성교육,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특수경비원교육, 경호요원교육 등)을 개발하여 관련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30) 김두현, 경호경비법, 백산출판사, 2001, 318면.

VI.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최근의 사회전반적인 취업난을 극복하고 남북분단 안보상황의 변화속에서 현역군인의 사기를 높여주고 장기복무 후 전역군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기회보상과 명예심이 반영된 지원정책이 절실히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민간군사기업의 발전과 취업지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직업보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취업알선을 군경력과 경험에 맞게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재취업창출을 위한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재취업제도의 적용은 현실적 적용방안과 법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장기적인 적용방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는 민간군사기업의 이윤창출과 국방자원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민간군사기업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한국민간조사전문기업'을 신설하는 정책적 지원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전역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및 민간군사기업의 소요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보다 세부적인 운용실태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였으나, 참여정부가 본 논문의 내용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사경비업의 발전을 통해 장기 근속한 전역군인들의 안정된 사회 진출이 가능토록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 구충희, “국방자원관리 아웃소싱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0.
- 국방부, 「국방저널(2003.11)」, 국방부, 2003.
- 국방부, “국방부 취업지원 추진계획”, 국방부, 2003.
- 김두현 외1,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02.
- 김두현, 「경호경비법」, 백산출판사, 2001.
- 김두현, “공인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제24집), 2001.
- 김정현, “제대군인 재취업을 위한 민간군사기업제도 도입방안 연구”, 「합참 제22호」 합동참모본부, 2004.
- 문광건,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한국국방연구원, 2002.
- 이송학, “제대군인 취업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인터넷, 한국군사문제연구소, 2003.
- 정길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61호)」, 한국국방연구원, 2003.
- Gollan., Private Sicherheitsdienste in der Risikogesell Chafe Freiburg I. Br., : Bath Medien-haus GmbH, 1999.
- P. W. Singer, Corporate Warrio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2001/02).

ABSTRACT

A Study on the Civil Military Enterprise System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charged

Kim, Doo Hyun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foreign civil military enterprise system an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charged soldiers who served for a long term and the welfare of soldiers highly.

At first,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DynCorp Inc. and Cubic Inc. of the United States, Sandline International Inc. of England and ATCO Frontec Inc. and Ednoonton Inc. of Canada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also, this paper is to analyze employment conditions and difficulties of the discharged soldiers and suggest to establish a institute of tentatively named "Korean Civil Military Enterprise" in terms of the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his civil military enterprise is to plan and manage military projects, to research and develop drill manuals and military doctrines and policies and to evaluate and manage the military training.

As the pattern of civil military enterprises, three types of Military Support, Military Consulting and Military Provider are presented.

Moreover, in order to advance the civil military enterprise, diverse training programs(for public civil investigators, guard advisors,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staffs) to utilize all sorts of special military fields are developed.